
정책참고자료

2019-1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 강원 원주, 전남 순천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생긴다.** _____ 4
- 사회적경제기업에 새로운 판로 제공, 공동 홍보마케팅 등 기대 -

2 국민권익위원회

- 박은정 위원장,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매각
및 양구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현장 방문** _____ 7
- 22~23일 해안면과 양구비행장 인근 주민 의견 청취 -

3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 _____ 9
- 폐업·재기지원 규모 확대 및 우수 컨설턴트 양성, 폐업지원센터 설치 -

4 교육부

- 미래혁신 주인공의 가치 있는 도전 학생'창업유망팀 300'뽑는다** _____ 11
- 모든 학생으로 참여기회 확대,
우수팀 상금 및 창업지원사업 연계맞춤지원 등 제공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약물 성범죄, 대형 산불 과학기술로 긴급대응 한다!** _____ 17
- 약물 성범죄, 대형 산불, 터널 사고,
지역별 안전도 진단 등 긴급대응연구 본격 착수 -

6 문화체육관광부

-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관광기금 300억 원 특별융자** _____ 23
- 금리 최저 1% 적용 및 기존 융자 업체 원금 상환기간 1년 유예 -

7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_____ 26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 대상으로 적합여부 점검 -

8 환경부

-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_____ 33
-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육외 근로자'에서 '육외 작업자'로 확대 -

9 고용노동부

- ‘내 삶을 바꾼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 115만 명 취업** _____ 40
- 취업자 1.5 → 22.5만 명, 1년 고용유지율 38.6 → 52% 등 양적·질적 성장 -

10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젊음, 즐거움, 스포츠”가 가득한「Y.E.S! 꿈드림 축제」열린다** _____ 45
-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축제 24일~25일 개최 -

11 국토교통부

-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정책으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_____ 51
- 난방 사용량 30년전 아파트 대비 43% 감소 -

12 해양수산부

- 플라스틱 없는 바다 만든다** _____ 58
-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 2030년까지 50% 저감 목표 -

강원 원주, 전남 순천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생긴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새로운 판로 제공, 공동 홍보마케팅 등 기대 -

- 판로 확보를 위해 고민하던 사회적경제기업에 희소식이 생겼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강원(원주), 전남(순천)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과 충남을 포함하여 4개 권역에 사회적경제의 유통거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 흩어져서 활동하던 마을기업(행정안전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유통하고 판매하는 시설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다.
- 앞으로 유통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공동 홍보·마케팅, 기업 간 교류·협력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먼저,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하게 될 강원 유통지원센터는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물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 완공이 되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강원 공간’ 직매장(2개소), 샵인샵(11개소), 온라인 쇼핑몰(2개소)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이 지금보다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혁신도시 안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 구매를 활성화하고, 기업간 협력·상생의 장으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 순천시 도시재생지역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전남 유통지원센터는 전남 동부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유통 거점이 될 전망이다.

- 1층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2층에는 기업들의 역량 교육과 상호 교류하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며, 3층에는라운지 형식의 열린카페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비롯해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사회적경제를 체험하도록 꾸민다.

- 또한, 기획상품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유통망 확보 등 판로 다각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 한편, 작년 하반기에 선정되었던 인천과 충남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인천지역 12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인천 유통지원센터는 마을카페를 비롯해 지역 대학생, 아파트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체험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9월부터 운영한다.

- 충남 유통지원센터는 충남 1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설립한 “따숨상사 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10월 개점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 플랫폼 단지』

내에 ‘판매장’을 조성하여 방문객 유입과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국민들은 사회적경제와 그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정 위원장,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매각 및 양구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현장 방문

- 22~23일 해안면과 양구비행장 인근 주민 의견 청취 -

□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70여 년 간의 오랜 숙원민원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일명 편치볼 마을) 민간인 통제선 내 무주지 소유권 이전과 양구비행장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양구군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 박 위원장은 첫날 오후 해안면사무소에서 양구군 해안면 민간인 통제선 내 무주지 소유권 이전 요구와 관련해 양구군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피난을 갔다. 휴전 이후 정부는 이곳에 전략촌을 조성해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집단 이주정책을 펼쳤다.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세대 당 인구수별로 토지를 분배하고 10년을 경작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토지 무상분배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1983년 특별법을 제정해 일부 토지는 국유화했으나 3,429필지에 달하는 토지는 여전히 무주지로 남아 경작권 불법매매,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형평성, 민통선 내 군작전 지역

관리에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그 동안 수차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유 재산법 등 현행법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주민들의 80%가 이북으로 피난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으로 38선이 그어져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이북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민원접수 이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3단계 민원해결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첫 조정은 지난해 12월 세종컨벤션홀에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9개 정부 부처·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큰 틀에서의 민원해결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올해 6월중 2차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무주지 매각 기준안을 마련한 후 주민 설명회를 거쳐 9월중 3차 현장조정회의에서 최종 해결할 계획이다.

- 박 위원장은 둘째 날 양구비행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현장과 노도과학화 전투훈련장 포사격 등 소음 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국방부, 군(軍)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1958년에 설치된 양구비행장의 소음과 진동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곳에 수리온 헬기장 추가 설치계획이 발표되면서 비행장 확장을 반대해 왔다.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

- 폐업·재기지원 규모 확대 및 우수 컨설턴트 양성, 폐업지원센터 설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재기지원사업 지원인원 : ('18년) 11,675명 → ('19년) 28,000명(예정)

**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 내용 : 컨설턴트 교육('19년 약 600명), 교육과정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

중기부는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 '19년에 30개 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20년에 30개 센터를 추가 설치·운영(총 60개 센터)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 →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중인 자,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19.7월)

* (지원규모) ('18년) 100억원 → ('19년) 300억원

1. 지원 내용

□ 폐업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시 절세·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 컨설팅) 집기·설비 관리, 철거·원상 복구 관련 컨설팅 및 철거·원상복구 비용(업체당 200만원) 지원

□ 취업전환 지원

- (재기교육) 취업 기본역량(면접·이력서), 취업정보, 재기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힐링캠프
- (전직장려수당) 재기지원 컨설팅·재기교육 수료 및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장려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을 통해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3단계 :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와 연계

□ 재창업 지원

- (재창업교육)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e-러닝교육(경영분야) 10시간과 업종전문교육 50시간으로 구성
- (멘토링) 교육이수 후 재창업시까지 전담 멘토링과 소그룹 멘토링을 연계해 안정적인 재창업과 재기 의욕 제고

2. 지원규모

- 폐업·취업전환 지원 : ('18) 95억원, 8,158명 → ('19) 337억원, 22,000명
- 재창업 지원 : ('18) 40억원, 3,517명 → ('19) 75억원, 6,000명

미래혁신 주인공의 가치 있는 도전, 학생 '창업유망팀 300' 뽑는다

- 모든 학생으로 참여기회 확대, 우수팀 상금 및 창업지원사업 연계맞춤지원 등 제공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19』 예선을 겸한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 (주최) 교육부, 과기정통부

(주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

-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는 창업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고취하고자 '16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4회째를 맞으며,
- 전국의 유망한 학생 창업팀* 300개를 선발하고, 이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혁신의 주역이 될 학생 창업 성공사례를 배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 7인의 학생으로 구성된 창업팀(창업 동아리, 학생 창업기업 등)

- 본 대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실험실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 창업팀(예비 ~ 창업 7년 이내)을 대상으로 하며,
-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까지 참가대상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약 2달간 진행되는 대회를 통해 선발될 300개의 창업유망팀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학생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 우선, 온라인 육성과정에서 고객 발굴 및 사업모형(Business Model) 개발 등 사업계획 고도화에 필요한 지식을 배워 사업계획서를 개선하고 온라인 상호 평가를 통해 핵심 성공전략을 개발하며,
- 교육부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대학창업펀드, 과기정통부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초기 자금 및 해외시장 발굴 등 후속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유망팀 중 상위 40팀은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도전! K-스타트업 2019’ 본선에 진출하여, 부처별 예선*을 통해 올라온 152개의 창업팀과 총 상금 13.5억 원을 향한 경쟁을 치르는 기회가 주어진다.

* (국방부)국방리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리그, 타부처 및 민간리그, 지자체리그

- 이외에도, 경진대회 결과 우수팀에는 시제품 고도화를 위한 상금과 장관상, 시제품 전시 및 투자유치 기회, 해외캠프 등 특전이 주어지며,
- 300팀 전원에게는 인증서와 아이디어 도용 방지를 위한 원본 증명 서비스를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무상 제공한다.

□ 지난 대회에서 유망팀으로 선발된 학생 창업팀 중에는 이러한 육성 과정을 기반삼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도 있다.

- ‘17~’18년 연속 유망팀으로 선정되어 부처 통합본선 5위를 차지한

‘(주)팜스킨(대표 곽태일)’은 3.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현재 20여개 국가에 자체 개발한 초유 화장품 판매를 통해 수출 100만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기계공학과 석·박사생으로 구성된 ‘(주)에이올코리아(대표 백재현)’는 ‘18년 유망팀 선정 이 후 기술가능성을 인정받아 대학창업펀드 2억 원과 약 18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 사물인터넷(IoT) 공기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올해 약 1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 ‘(주)뉴빌리티(대표 이상민)’는 운전자의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18년 유망팀에 선정되어 현재 자동차부품 전문회사와 공동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연세대 기술지주회사의 대학창업펀드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에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접수 기간 (6.10. ~ 7.1., 17:00) 동안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changg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 5월 29일(수) 동남권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에서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 일정 >

권역	일시	장소
동남권	5.29.(수) 14:00	부산창업카페 부경대대연점(2호점)
대경권	5.30.(목) 14:00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산관 805호
강원권	5.31.(금) 14:00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704호
호남·제주권	6.3.(월) 14:00	전남대학교 만들마루 3층 라운지
충청권	6.4.(화) 14:00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 125호
수도권	6.5.(수) 14:00	VR빌딩 B1 블루룸

- 참가자격 및 대회 진행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및 과기정통부 누리집의 대회 참가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지난 몇 년간 대학과 초·중등 교육현장에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기반이 확대되면서, 창의력과 열정을 겸비한 우수 인재들의 적극적인 창업도전이 계속되는 등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며,

-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미래 혁신인재들이 앞으로 국가 경제를 선도할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작년의 경우 기술기반의 창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팀이 통합 본선(도전! K-스타트업) 수상팀 10개 가운데 4개였다.”라며,

- “실험실의 성과가 창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공계 대학원생을 포함한 연구자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라고 언급하였다.

- 【참고】 1.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
2.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포스터

□ 추진목적

-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소개 및 우수 창업역량을 보유한 학생(팀)들의 참여 유도

□ 일시 및 장소

- 2019.5.29.(수) ~ 6.5.(수) 중 6회/ 권역별

권역	일시	장소
동남권	5.29.(수) 14:00	부산창업카페 부경대대연점(2호점)
대경권	5.30.(목) 14:00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산관 805호
강원권	5.31.(금) 14:00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704호
호남제주권	6.3.(월) 14:00	전남대학교 만들마루 3층 라운지
충청권	6.4.(화) 14:00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 125호
수도권	6.5.(수) 14:00	VR빌딩 B1 블루룸

□ 참석대상

- 권역 내 학생창업지원 관련 담당 교직원, 참가희망 학생 등

□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참석자 등록	
14:10~14:30	20'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소개 (지원 및 프로그램 절차, 혜택 등)	주관기관
14:30~14:40	10'	영업기밀보호제도 및 원본증명서비스 설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4:40~15:00	20'	질의응답	

changgo.or.kr



도전!
K-스타트업
2019

창업경진대회 학생리그 0527-0701

모집기간

학생 창업유망팀 300

I 참가자격/방법

- 참가요건: 3~7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7년 이하(12.5.28 이후) 창업팀
- 실전창업트랙: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원)에 소속된 재학생 (대학의 경우 휴학생 포함)이 팀장으로 구성된 팀
 - 기술창업(실용실창업)트랙: 기술을 보유한 대학생생이 팀장으로 구성된 팀
- 참가방법: 창업유망팀 300 홈페이지(changg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19년 6월 10일 09:00부터 7월 1일 17:00까지

I 대회 참여 혜택

- 300 선발팀: 온라인 육성과정 및 BM멘토링 제공, 창업유망팀 인증서(교육부 장관)발급, 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지원유형) 등 교육부 창업관련 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
인간·다부처 지원사업(IP디딤돌 등) 연계기회 제공
- 300 우수팀: 사업고도화 상금 팀당 50만원 지급
- 실전창업트랙 상위 50팀: 시장평가금 통한 교육부 장관상 및 추가상금 (총 1천만원) 지급, 해외캠프 특전(예정)
 - 기술창업트랙 상위 10팀: 대학 창업펀드 연계 IR 기회제공 및 교육부 장관상 수여, 우수팀 추가상금(총 1천만원) 지급
- * 우수팀 혜택은 도전 K-스타트업 2019 최종본선출발행사에 진출 시 제외

I 권역별 설명회

권역	일시	장소
동남권	5.29(수) 14:00	부산창업카페 부경대대연정(2호점)
대경권	5.30(목) 14:00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산관 805호
강원권	5.31(금) 14:00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704호
호남제주권	6.3(월) 14:00	전남대학교 안동마루 3층 라운지
충청권	6.4(화) 14:00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 125호
수도권	6.5(수) 14:00	VR빌딩 B1 북부홀

주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NRF 한국연구재단 KOEF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약물 성범죄, 대형 산불 과학기술로 긴급대응 한다!

- 약물 성범죄, 대형 산불, 터널 사고, 지역별 안전도 진단 등 긴급대응연구 본격 착수 -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약물 성범죄의 사전 예방, 대형 산불로 필요가 제기된 산불의 확산예측과 신속한 상황전파, 터널 내 2차 사고 방지 및 지역별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등 최근 문제된 이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적극 나선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5월 23일(목),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4개 과제를 공고하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기존 1~2년 ⇨ 2달 이내)한 '19년 신규 R&D 사업(과기정통부, 행안부 협업)
* '19년 예산 28억 원(과기정통부 23억 원, 행안부 5억 원)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협업하여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슈 모니터링 등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실증-현장적용까지 전주기적 문제해결을 신속히 추진한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추진 체계>

1단계(사전준비)		2단계(기술개발 및 실증)	3단계(적용·확산)
과기 정통부	- 분야별 전문가 Pool, 기존 R&D DB화 등	R&D 기술개발 및 실증 동시 실시 - 현장 대응 및 복구 - 원인 규명 및 피해 확산 방지 등 과기정통부 + 행안부	非R&D 기술개발 결과 적용·확산 - 기술구매 및 현장적용 *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행안부	- 위해요인 사전예측, 자원 관리·지원체계 준비 등		행안부, 수요부처(지자체)

문제
발생

- 이 사업은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의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기존 1~2년 ⇨ 2달 이내)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패스트트랙(Fast-track) 형 연구개발(R&D)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령을 개정(공고기간 단축·생략 가능) 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19.3.)

제6조 1항 4호(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최종 선정된 4개 과제는 중앙부처·청 및 지자체로부터 제기된(4월) 35개의 긴급현안 수요 중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17개 부처·청 및 광역지자체 참여, 4.30)”에서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최종 선정과제>

과제명	수요 기관
약물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	경찰청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	산림청
지자체 관리 대상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개발	대구시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개발	행안부

- 과기정통부·행안부는 공동으로 4개의 과제를 공고하고 (공고기간 : 5.23 ~ 6.6, 2주) 선정된 과제에 대해 1~2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 제기 부처·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에 나서게 된다.

※ 공고: 한국연구재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s://ernd.nrf.re.kr>)

◆ 약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경찰청)

- 최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슈가 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주류·음료 등에 성범죄 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정확도와 낮은 단가의 휴대용 탐지 키트를 개발하고, 경찰청이 적용·확산을 주관하여 일반 국민들도 탐지 키트를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산림청)

- 최근 겨울고온, 건조일수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건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상정보(풍향, 풍속 등)의 실시간 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불현장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 현장담당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정보전파 서비스를 개발한다. 개발된 기술은 산림청을 통해 산불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 지자체 관리 대상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개발(대구시)

- 터널 사고는 공간의 밀폐성으로 인해 외부 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크고 특히 지자체 관리 터널은 사고감지시스템 미비로 사고발생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터널 내 돌발사고 감지 기술과 위험 상황의 신속한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할 계획이다.

◆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개발(행안부)

- 최근 KTX 탈선, 고양 저유소 화재 등과 같은 다수부처 관련 신종·복합 사회재난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재난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재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의 위험요소 발굴·분석, 관리역량 진단 등 지역의 사회재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긴급연구를 수행하여, 재난현장 중심의 새로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수요 발굴부터 기술개발,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강화하여,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신종 감염병, 도심지 대형 싱크홀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
- 한편, 이러한 재난·안전 문제들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특정 부처나 연구 기관의 대응으로는 실질적 대응 및 문제해결이 곤란
 - * (예시) 가축 전염병 ⇨ 축산농가 타격 + 인간 감염 위험 + 환경파괴 복합피해 발생
- ⇨ 부처 협업 기반(과기정통부 + 행안부)의 혁신적 긴급대응체계 마련

□ 사업 개요(안)

- (사업 목적)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 이슈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준비 ⇨ 긴급R&D(기술개발 및 실증) ⇨ 적용·확산을 통한 현장 지원의 전주기적 재난·안전 사고 대응

1단계(사전준비)		2단계(기술개발 및 실증)	3단계(적용·확산)
과기 정통부	- 분야별 전문가 Pool, 기존 R&D DB화 등	R&D 기술개발 및 실증 동시 실시 - 현장 대응 및 복구 - 원인 규명 및 피해 확산 방지 등 과기정통부 + 행안부	非R&D 기술개발 결과 적용·확산 - 기술구매 및 현장적용 *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행안부, 수요부처(지자체)
행안부	- 위해요인 사전예측, 자원 관리·지원체계 준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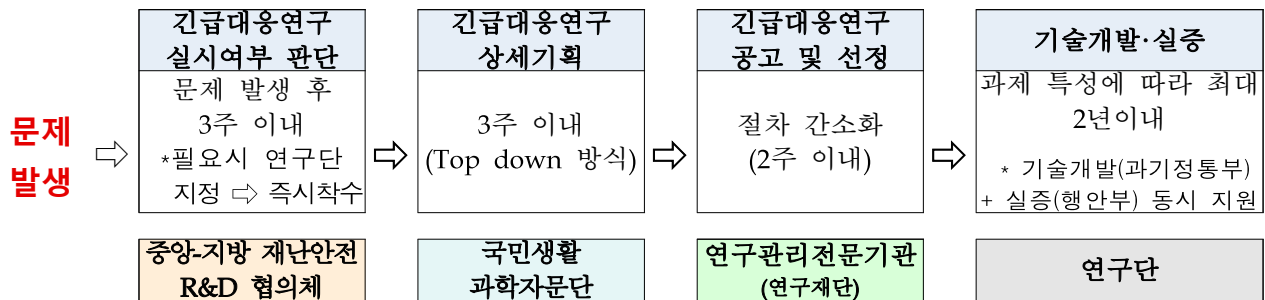
문제
발생

- (사업 규모) '19년 28억 원(과기정통부 23억 원, 행안부 5억 원) / 과제당 2년 이내
 - (사전 준비) 사고 신속 대응 및 효과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이슈별 전문가 Pool 구성, 위해요인 사전예측 등) * 3억 원
 - (기술개발 및 실증) 사고 현장대응, 피해복구, 조사분석 및 원인규명 등 긴급 R&D(실증 포함) 지원 * 25억 원
 - (적용·확산) 연구개발 성과 현장 적용(기술구매, 제품화), 재난지역 현장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 행안부(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 (추진 절차) 대응여부 결정(중앙-지방 협의체) ⇨ 긴급대응 연구 기획(국민생활과학자문단*, 중점대응기관**) ⇨ 연구단 선정 ⇨ 기술개발 및 실증

* 주요 이슈별로 산·학·연 전문가, 과학기자 등 총 113명으로 구성 · 운영
 ** 먹거리, 질병 등 7대 문제분야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심 대응기관 지정 · 운영

- 시급히 연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연구단 지정(미공고), 공고 기간 단축 및 제출 서류·평가절차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 型 긴급연구 체계 도입
- 공공서비스 부처 긴급R&D 수요 반영을 위해 정기적 문제발굴 병행



■ (문제 대응) 현장 복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및 현장 적용

- * (예시) 재해로 인해 손상된 문화재 복원 기술개발 및 적용
- * (예시) 식중독 사고 대응 식중독균 신속검출 기술 실증 및 적용
- * (예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인타임 위기대응 시스템 개발·적용

■ (재발 방지) 원인 규명, 피해확산 방지 등 과학기술적 해법 모색

- * (예시) 신종 감염병 대응 공간방역 장비개발 및 실증(의료시설, 역사 등)
- * (예시) 특정 지역 싱크홀 발생에 대한 원인 및 주거안전성 분석
- * (예시) 유해 외래종(붉은불개미 등) 유입 위험성 분석 및 방역 기술 적용

- 긴급대응 연구 후, (필요시) 일반 R&D 후속연구 과제 추가 기획

<참고>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VS 일반 재난 안전 R&D

유형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일반 재난 · 안전 R&D
목적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문제해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원천 기술 개발
주관	R&D 부처(과기정통부) 및 재난대응 부처(행안부)의 유기적 협업	먹거리(식약처), 환경오염(환경부), 감염병(복지부, 질병) 등 개별 대응
주요 특징	(절차) 재난발생 2개월내 연구착수 (연구기간) 최대 2년 (실증,적용포함) (평가) 실질적 문제해결 여부	(절차) 연구착수까지 1~2년 소요 (연구기간) 3~5년 (연구기간만 산정) (평가) 논문, 특허, 기술료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관광기금 300억 원 특별용자**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관광기금 300억 원 특별용자****- 금리 최저 1% 적용 및 기존 용자 업체 원금 상환기간 1년 유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강원 지역 산불로 인한 관광시설 소실 등의 피해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침체된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체의 관광시설 복구와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특별용자를 실시한다.

*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문체부는 300억 원 규모의 용자와 함께, 기존 용자 업체 중 신청자에 한해 원금 상환기간 1년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관광기금 특별 용자지원 지침'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자금 신청 1차 5. 27.~6. 12. / 2차 6. 13.~28.

조속한 특별용자 지원을 위해 운영자금 신청 접수를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한다. ▲ 1차 신청 기간은 5월 27일(월)부터 6월 12일(수)까지, ▲ 2차 신청 기간은 6월 13일(목)부터 28일(금)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강원 지역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정 결과는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선정된 업체는 7월 1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용자취급은행에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 신청 5. 27.~11. 15.

시설자금 신청은 5월 27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하며, 신청자는 6월 12일(수)부터 12월 13일(금)까지 용자취급은행에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자금보다 유리한 1% 대로 제공한다. ▲ 운영자금 지원한도는 2배로 상향하고, ▲ 시설자금은 기성고* 인정금액의 100%(중전 60%)까지 확대해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관광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시장이 빨리 회복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특별융자 실시 계획

□ **추진배경**

- 강원지역 산불로 관광시설 소실 등의 피해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침체된 특별재난지역*에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

*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 **융자지원 내용**

- (지원규모) 300억원
- (지원대상) 재난지역 관광사업체 및 관광지 내 관광연관 업종 등
- (융자원금 상환유예) 기 융자업체 원금 상환기간 1년 유예 및 만기연장
※ 예) 2년 거치 3년 상환(5년) → 3년 거치 3년 상환(6년)
- (금리우대) 특별융자를 통한 신규 융자업체는 1%(변동금리) 일괄 적용
- (지원한도 확대) 운영자금 한도 상향(신청한도 1억원~10억원 → 2억원~20억원), 시설자금 신청한도 내에서 전액 배정 및 지급(공사자금의 60%→100%)

□ **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공고	5. 22.(수)	좌동
신청서류 접수기간	1차 : 2019. 5. 27.(월) ~ 6. 12.(수) 2차 : 2019. 6. 13.(목) ~ 6. 28.(금)	5. 27.(월) ~ 11. 15.(금)
접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강원지역 관광협회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영업점
심사 · 선정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매월 접수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
선정발표	1차 : 2019. 6. 28.(금) / 2차 : 2019. 7. 22.(월) * 게시: 문체부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 신청기간	2019. 7. 1.(월) ~ 9. 30.(월)	6. 12.(수) ~ 12. 13.(금)

7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 대상으로 적합여부 점검 -

《 주 요 내 용 》

◆ 쌀·밭농업·조건불리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점검기간) 2019년 5월 27일 ~ 9월 15일(논 타작물: 7월1일~10월31일)

○ (점검방법)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과학적·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전자지도(팜맵) 및 무인비행장치(드론)도 활용

* 직불금 신청현황(5.20.기준): 쌀 4,136천필지/816천ha, 밭고정 1,856/287, 조건불리 544/93

* 논 타작물 신청현황(25천ha, 5.20.기준): (조사료)8,511ha, (일반꽃거름)7,223, (두류)8,509, (휴경)810

○ (점검내용)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고정직불금), 논벼 재배 여부(변동직불금), 논벼 대신 타작물 재배 여부(논 타작물재배)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536천 필지(1,206천명/1,196천ha)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팜맵)와 무인비행장치(회전익드론)를 일부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 특히, 일부 지역에 대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참고1 직불제 이행점검 모습



※ 농업경영체 정보,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을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태블릿PC)를 활용하여 이행점검 실시

참고2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이행점검 사항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점검기간: 5.27.~9.15.]

- (고정직불금)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확인
 -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②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③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④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불금)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밭농업직접지불제 [점검기간: 5.27.~9.15. / 논이모작: 3.27.~5.24.]

- (논이모작) 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 확인
- (밭고정)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확인
 -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②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③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점검기간: 5.27.~9.15.]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실제 지목 및 작물 재배면적
 - 작물 미재배 시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했는지 여부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점검기간: 7.1.~10.31.]

-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참고3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개요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목적)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등
- (지급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서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지급단가) 고정: 평균 100만원/ha(진흥 107.6만원, 비진흥 80.7만원),
변동: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당해 10월~익년 1월)에 따라 결정
- (이행점검)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물을 가두어 버 재배 여부 확인
* '16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수행

□ 밭농업 직접지불제

- (목적)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 (지급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지급단가) 밭고정: 평균 55만원/ha, 논 이모작: 50만원/ha
- (이행점검) 농지 형상·기능유지 여부, 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조사
* 밭농업 '12년, 논이모작 '16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수행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목적)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급대상) 읍·면지역 중 농지면적의 50% 이상이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법정리 지역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서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정
- (지급단가) 논·밭·과수원 65만원/ha, 초지 40만원/ha(국고 80%+지방비 20%)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초지로 활용할 경우 m²당 40원 지급
- (이행점검) 농지(초지)로 이용(관리)하는지 여부
미재배농지의 경운 여부 등 조사
 - * '13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수행

참고4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개요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 (목적)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 (목표) 55,000ha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 추진
- (자격요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농지 포함)으로서 최소면적 1,000㎡ 이상 신청
- (지급단가) 조사료 430만원/ha, 일반·꽃거름작물 340, 두류 325, 휴경 280
- (제외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 (이행점검) '19.7.1. ~ 10.31.
 -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8

환경부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는다.
- 둘째,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 >



- 셋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한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3등급 및 ‘등급외’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현행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되어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5월 23일 공개된다.

○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단위의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정부는 연구관리 센터를 통해 민간전문가,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붙임1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1. 시행령 주요내용

①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절차

- (지정계획 수립·공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지정요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법인·단체 中
 - 사업목표 및 계획이 지정목적에 적합할 것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 재정 확보능력이 있을 것
 - 미세먼지 분야의 조사·연구 또는 교육 실적이 있을 것
- (심사단 구성)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 적합여부를 심사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 >



②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취소 요건

- 법에서 정한 취소요건 이외에 추가 요건을 정함
 -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

③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
 - (현행)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개정) '옥외 근로자'를 '옥외 작업자'로 변경하여 농어업인 등도 포함

2. 시행규칙 주요내용

①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및 절차 등

- (제출서류)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 구체화
 -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 미세먼지 분야의 조사·연구·교육 또는 기술개발 실적
 -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 (지정절차) 지정서 발급, 현판 제공 및 사업관리
 -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보고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능 강화

-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조문정리

③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범위 확대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까지 확대
 - (현행)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신청이 가능
 - (개정)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하여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

붙임2

전문용어

□ 취약계층

-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①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②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함(시행규칙 제14조)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 환경부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3등급 및 '등급외'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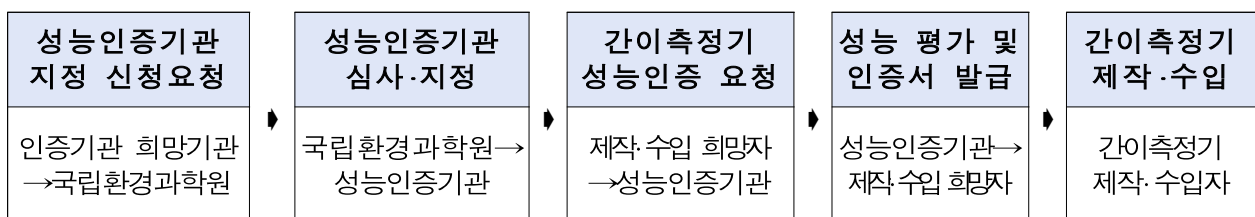
붙임3

질의응답

1.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란 무엇이며, 왜 인증기관을 추가하는지?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 ~3등급 및 '등급외'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기기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가 대상임
- 현행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신청이 가능하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원활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하려는 것임

< 성능인증 절차 >



9

고용노동부

‘내 삶을 바꾼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 115만 명 취업

- 취업자 1.5 → 225만 명, 1년 고용유지율 38.6 → 52% 등 양적·질적 성장 -

<취업성공패키지의 ‘공(功)’>

◆ 취업성공패키지 개요(2019년 기준) <상세: 참고1>

- (개요)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 직업능력 개발(2단계) → 취업 알선(3단계)’의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미취업 청·장년층 등
- (목표 지원 인원 및 예산) 22.7만 명, 3,710억 원

□ 정부의 대표적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지원 인원이 200만 명을, 취업자 수는 115만 명을 넘어섰다.

○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이 사업은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세부통계: 참고2>

1) 양적 성장을 살펴보면 지원 인원과 대상을 꾸준히 늘려 취업 지원이 절실한 국민을 폭넓게 지원했고 취업자 수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 지원 인원: (2009년) 0.9만 명 → (2018년) 30.8만 명

- 지원 대상 확대: (2009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 (2011년) 만 34세 이하 청년 → (2012년) 만 35~64세 중장년 → (2017년) 만 65~69세 중장년

- 취업자 수: (2010년) 1.5만 명 → (2017년) 22.5만 명(2018, 2019년 통계 미정)

2) 질적 성장을 보면 그동안 사업 개선을 계속 추진해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6개월, 12개월)이 꾸준히 높아졌다.

- 취업률(%): (2010년) 59.2 → (2018년) 64.9* (5.7%p ↑)

* 4년제 대학 졸업자 평균 취업률 62.6%(2017년 기준, 교육부)와 비교할 때 2.3%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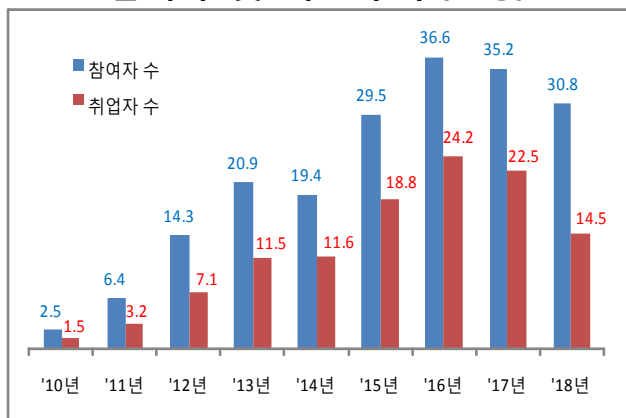
- 6개월 고용유지율(%): (2010년) 60.1 → (2018년) 62.8 (2.7%p ↑)

- 12개월 고용유지율(%): (2010년) 38.6 → (2018년) 52 (13.4%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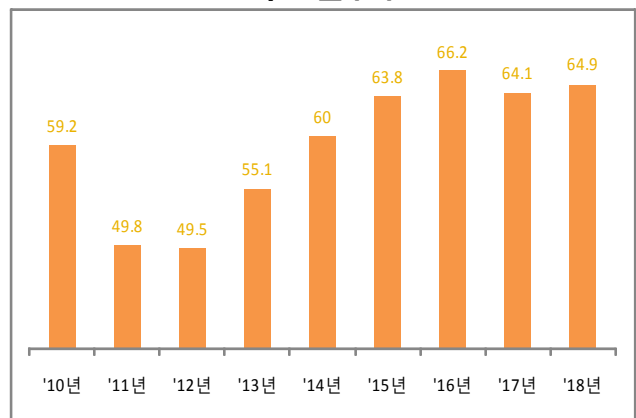
* ▲ 성과관리 전산망이 본격적으로 구축·운영된 2010년 이후 취업 성과 분석

▲ 2018년 통계는 서비스 진행인원(2019년 3월 기준 7만 명)의 취업 성과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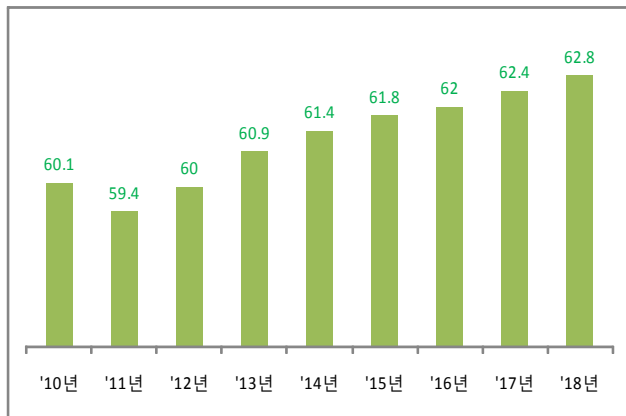
참여자 및 취업자 수(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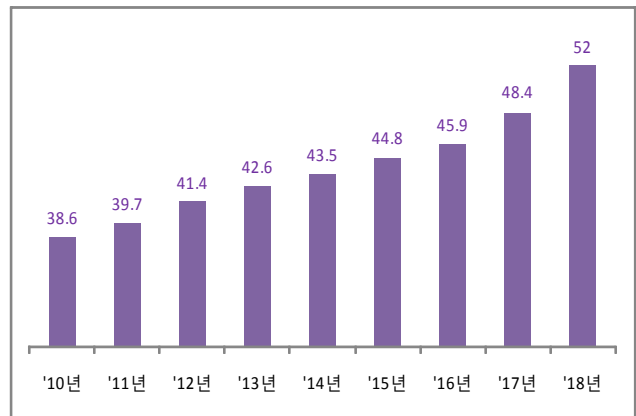
취업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3)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취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상세 우수사례: 참고3>

- 이혼과 항암치료로 우울증에 빠져 알코올에 의존하던 여성 가장이 주거지 근처의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한 사례,

-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넘도록 게임에만 빠져 있던 니트족 청년이 제약회사에 취업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례,
- 50대의 나이에 13년간의 경력 단절을 딛고 사회복지 기관의 재무 담당자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된 사례 등에서
- 취업성공패키지가 구직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과(過)'>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 첫째,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하여 구직자 및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고용정책기본법」에 취업 취약 계층 고용촉진을 위한 일반적 규정만 명시

○ 둘째, 현장에서는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지적하고 있다.

- 상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 연계 및 구직 기술 향상 등 상담의 품질을 높이며, 고용-복지 연계와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 셋째,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다.

-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나,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다.

-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로서는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 (2019년 2월 고용부 장관 현장 간담회, 취업성공패키지 옴부즈만 등)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려고 하니 올해 예산이 바닥나서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취업하려면 도움이 필요한데 내년까지 기다리라니..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제가 원하는 게임 산업 등의 직종의 직업 정보는 상담사가 잘 모르고, 직업훈련 외에는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 “직업훈련 기간에는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나와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구직 기간에는 수당 지원이 없어 생계가 막막합니다. 아무 일자리라도 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향후 발전방향: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정부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이러한 정부의 방향성에 노사도 공감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기 도입에 합의했으며, 올해는 추가 논의를 하여 제도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로 단순히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니다.
-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1:1 밀착 상담을 하여 취업 장애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자 유형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 참여자는 이러한 밀착 상담을 바탕으로 수립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한편 취업성공패키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 임서정 차관은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실업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고 하면서,

- 그러나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낮은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내년에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협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0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젊음, 즐거움, 스포츠’가 가득한 ‘Y.E.S! 꿈드림 축제’ 열린다

-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축제 24일~25일 개최 -

-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2019년 「Y.E.S! 꿈드림 축제」가 24일 (금)부터 25일(토)까지 이틀 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이 축제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등 800여 명이 참석하는 첫 전국 규모의 체육문화 축제이다.
- 이번 축제는 다양한 경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과 문화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최근 한 달 동안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36.9%로 나타남
- “Youth(젊음), Enjoy(즐거움), Sports(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이번 축제는,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을 대표하는 꿈드림 청소년단*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 기획, 축제운영,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기주도 활동으로 진행된다.

< 꿈드림 청소년단 >

- 구 성 : 전국꿈드림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각센터 당 1명 이상)
- 주요역할 :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수렴 및 욕구파악과 인식개선 홍보 등
- 운영방법 : 시·도별 회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사항 도출

○ 첫 번째 주제 ‘Youth(젊음)’ 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스포츠 자격취득 과정 등 관심분야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공과정을 강연하는 ‘나의 도전기’ , 청소년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모의창업 공간* ,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거리공연’ 등이 진행된다.

* 모의창업 공간(뽀뽀비즈) : 창업에 관심 있거나 실물경제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재 선정에서 판매·결산까지 체험하는 프로그램

○ 두 번째 주제 ‘Enjoy(즐거움)’ 는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구역별 부대행사로 운영된다.

- 장기자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꿈과 끼를 뽐내고, 외부기관과 연계한 정보체험 공간*을 운영하여 정보제공 및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마련된다.

* 정보체험 공간 : 성격 및 심리검사, 청소년 모의재판 체험, 응급구조 체험, 드론(무인기) 비행체험, 스포츠스태킹(컵 쌓기 게임), 체육상자 등

○ 마지막 주제 ‘Sports(스포츠)’ 는 꿈드림 센터 실무자와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랑운동회와 종목별 팀 대항전*을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종목별 팀 대항전 : 미니축구, 농구, 발야구, 배드민턴, 100m 달리기 등

□ 이번 축제에는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민·관 기관이 동참한다.

- 대한안전협회에서는 응급구조 체험활동, 대한스포츠비행드론협회에서는 드론(무인기) 체험공간, 한국교육개발원은 포토존(사진촬영공간), 교육부에서는 진로체험버스(청소년 모의재판 등)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개·폐막식 및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스포츠 대회 및 진로탐색 강연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이마트와 롯데칠성음료에서는 청소년들의 간식과 음료를 후원한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장은 “이번 축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또래들과 함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라며,

-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살리고 더 많은 가능성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 【붙임】 1. 2019 Y.E.S! 꿈드림축제 홍보포스터
2. 2019 Y.E.S! 꿈드림축제 행사 개요

붙임1

2019 「Y.E.S! 꿈드림축제」 홍보포스터



붙임2

2019 「Y.E.S! 꿈드림축제」 행사 개요

□ 추진 배경

- 다양한 활동 경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소속감·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문화 활동 기회 제공

□ 행사 개요

- 행사명 : 「Y.E.S! 꿈드림 축제!」
 - * YES의 의미? Youth, Enjoy, Sports 각 단어의 테마를 가진 축제로 구성
- 일 시 : 2019년 5월 24일(금) ~ 25일(토) / 1박 2일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시 목천읍 소재)
- 대 상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및 실무자 800여명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 테마별 운영프로그램(안)

테 마	프로그램	방 법
Youth	나도 선생님	· 스포츠 자격 취득 청소년의 성공담, 자격취득 노하우 강의 및 실습지도 등
	플리마켓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모의창업 부스 운영
	버스킹	·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형태의 공연
Enjoy	장기자랑	· 센터 내 댄스, 가요 등의 동아리 및 개인 청소년 사전 신청 후 당일 대회 실시
	정보 및 체험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민·관 기관의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체험의 장 마련
	IT Zone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e-sports 게임 대회, 게임분야 진로 정보 제공 등)
Sports	팀별 대항	· 미니축구, 농구, 배드민턴, 발야구 등의 토너먼트 경기
	명랑운동회	· 실무자와 함께하는 게임 및 이벤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 플라잉디스크, 국궁, 암벽타기 등 진행

□ 전체 프로그램

○ 1일차(5.24)

구 분	5월 24일(금)							
	실외					실내		
	대운동장	풋살장	농구장	소운동장	중앙광장	국제회의장	중강당	종합체육관
13:00~13:30	개막식							
13:30~16:00	명랑운동회						IT Zone 운영	
16:00~17:00	100m 달리기	미니 축구	농구	발야구	부스 운영	바운드 볼		도전 체력왕!
17:00~18:00	플라잉 디스크							
18:00~19:00	저녁시간					저녁시간		
19:00~22:00						장기 자랑		

○ 2일차(5.25)

구 분	5월 25일(토)						
	실외						실내
	대운동장	국궁장	챌린지 코스	상생 협력장	풋살장	소운동장	종합 체육관
07:00~09:00	기상 및 조식						
09:00~11:00		국궁	암벽대회	오리엔 티어링	미니축구 결승전	발야구 결승전	배드민턴 및 농구 결승전
11:00~11:30	폐막식						
11:30~13:00	점심시간						
13:00~	귀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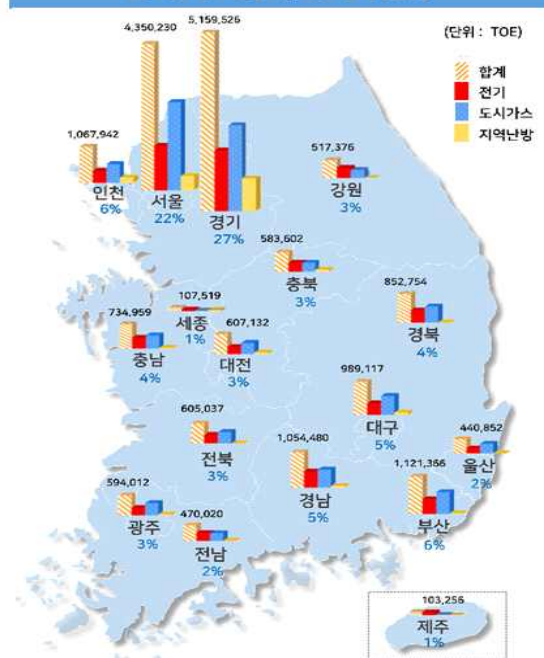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정책으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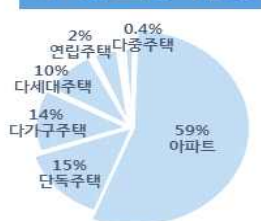
- 난방 사용량 30년전 아파트 대비 43% 감소 -

2018년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현황

전국 시도별 에너지사용량



주거용도별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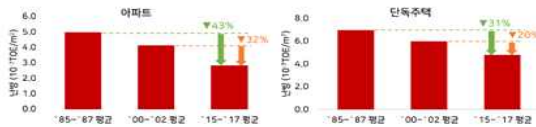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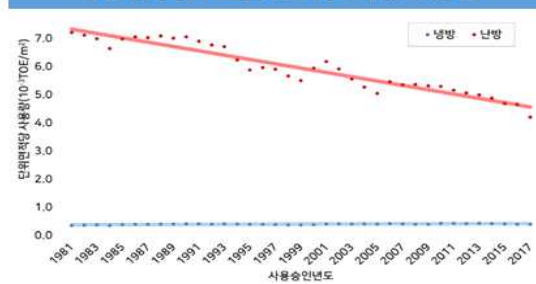


에너지원별 사용량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만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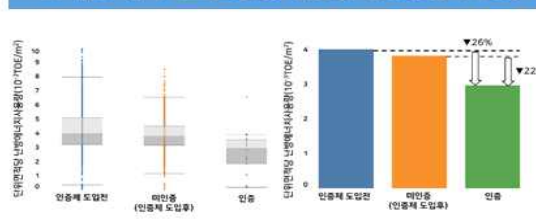
사용승인연도별 단위면적당사용량



준공시기별 난방사용량(면적당)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과 난방사용량(면적당)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전국 모든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5월 30일 발표했다.

* '18.8.13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국가통계 승인(제408003호, 한국감정원)

-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통계는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주거용도별(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건물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별로 집계하며 금년부터 매년 5월말에 발표한다.
- 동 에너지 사용량 통계 및 분석 자료는 지자체별 도시재생사업, 주택정비사업의 효과분석,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효과적인 감축수단 발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 2018년 주거용 건물 전체 에너지사용량(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19,359천TOE이며, 시도별, 세부용도별, 에너지원별 사용량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시도별) 경기(27%), 서울(22%)이 전국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물 연면적(43%)에 비해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도시화율이 높은 수도권이 전체 연면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석탄, 석유 등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외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지방의 경우 사용량 비중이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으나 향후 매년 발표할 통계 변화 추이 분석과 전망을 통해 효과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구분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북	충남	대전
사용량 비중	27%	22%	6%	6%	5%	5%	4%	4%	3%
연면적 비중	25%	18%	7%	5%	7%	5%	5%	4%	3%
구분	전북	광주	충북	강원	전남	울산	세종	제주	전체
사용량 비중	3%	3%	3%	3%	2%	2%	1%	1%	100%
연면적 비중	4%	3%	3%	3%	3%	2%	1%	1%	100%

<전국 대비 지역별 에너지사용량(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과 연면적의 비중 >

- ② (세부용도별) 아파트(59%)가 가장 높고, 단독주택(15%), 다가구주택(14%), 다세대주택(10%), 연립주택(2%), 다중주택(0.4%)순으로 집계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전체 연면적(64%)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타 세대와 인접하는 아파트 구조의 특성과 지역난방 비중이 높은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중주택
사용량 비중	59%	15%	14%	10%	2%	0.4%
연면적 비중	64%	16%	11%	7%	2%	0.2%

<전체 대비 주거 용도별 에너지사용량(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과 연면적의 비중 >

- ③ (에너지원별) 도시가스 사용량(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는 37%, 지역난방은 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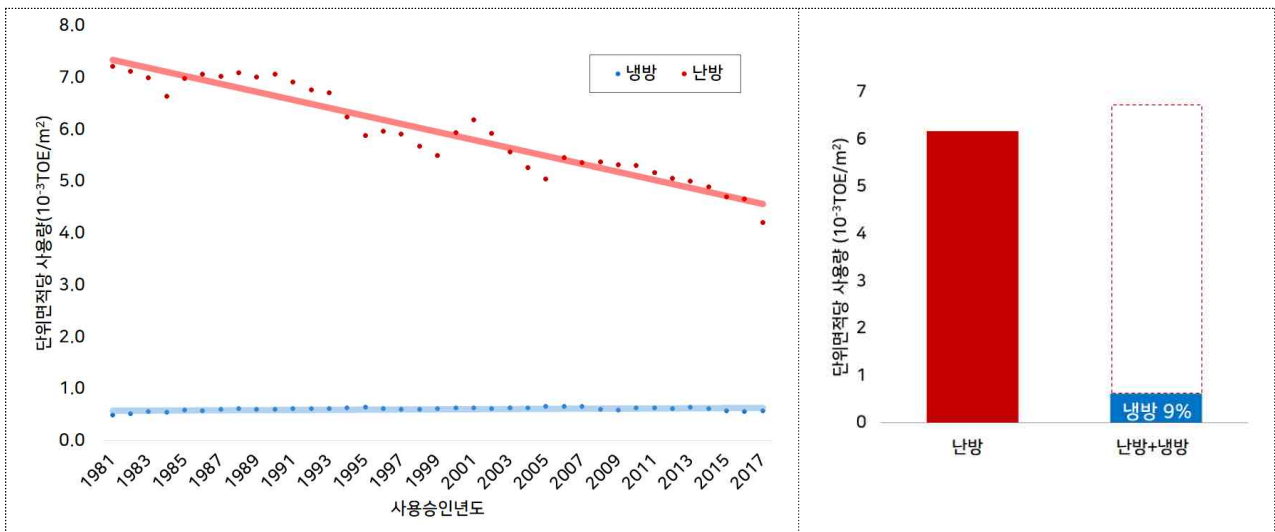
* 에너지원별 사용량: 도시가스(10,372천TOE), 전기(7,128천TOE), 지역난방(1,859천TOE)

□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에너지 사용량 변경 추이는 다음과 같다. (중부지방 기준)

- ① (난방사용량) 30년전 사용승인(‘85~‘87년)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최근(‘15~‘17년) 사용승인된 동일 유형 주택과의 단위면적당 난방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43%($4.97 \rightarrow 2.82 \text{ } 10^{-3} \text{TOE/m}^2$), 단독주택은 31%($6.98 \rightarrow 4.78 \text{ } 10^{-3} \text{TOE/m}^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열기준 강화와 기밀시공 향상에 따라 난방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 ② 냉방사용량($0.6 \times 10^{-3} \text{TOE/m}^2$)은 냉·난방사용량($6.8 \times 10^{-3} \text{TOE/m}^2$)의 약 9%에 불과하고 시계열로 뚜렷한 증가 양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 기후변화 및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라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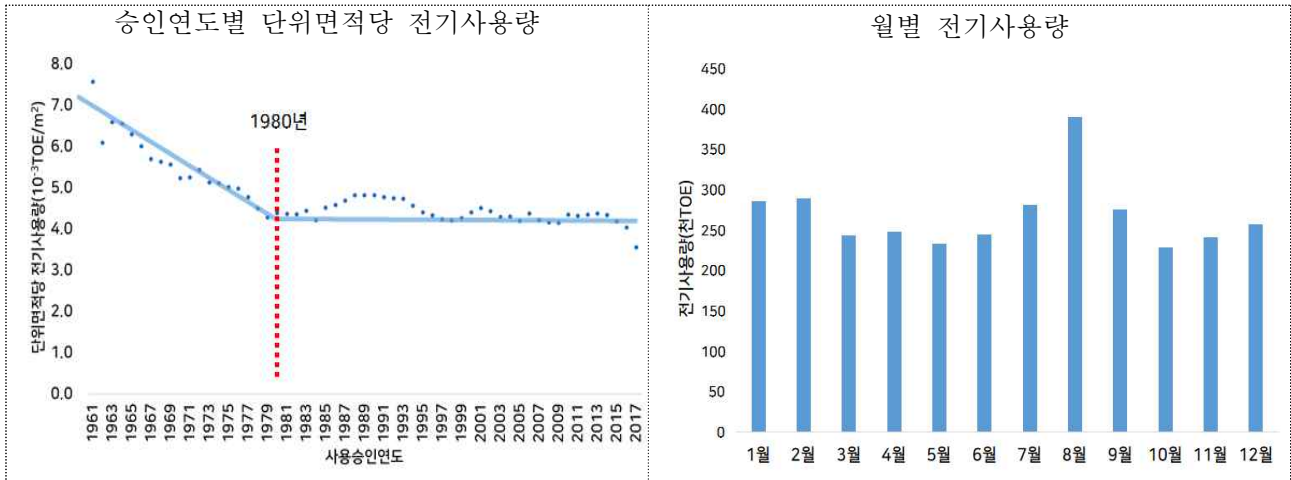


<아파트 및 단독주택 준공시기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 비교>



<사용승인연도별 주거용 건물 단위면적당 냉난방에너지사용량 및 냉난방 비율>

- ③ (전기사용량) 주거용 건물의 단위면적당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1980년 사용승인연도 이전 주거용 건물에 비해 그 이후 지어진 주거용 건물의 전기사용량이 줄어들고, 완만하게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 한편, 주거용 건물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절기에 전기난방기기 등의 증가로 중간기에 비해 약 14%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용 건물 사용승인연도별 단위면적당 전기사용량 및 월별 전기사용량 >

□ 건축물 단열기준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녹색건축물 정책·제도 강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변경 추이는 다음과 같다.

- ① (단열기준) 단열기준*이 강화될수록 단위면적당 난방사용량은 모든 주택유형에서 지속적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1979년 9월 단열기준을 최초로 시행한 이래 '01년, '08년, '13년, '16년, '18년 단열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해 왔으며, 그 결과 에너지 사용량의 유의미한 감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시장의 수용성과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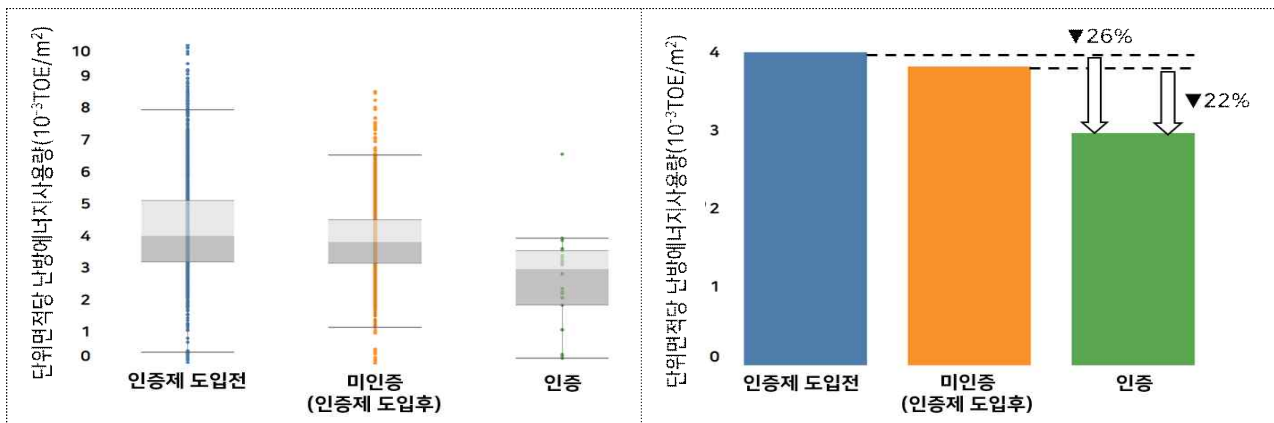
<주거 유형별 준공시기에 따른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

* A그룹('79.09이전), B그룹('79.09~'00.12), C그룹('01.01~'08.06), D그룹('08.07~'13.08), E그룹('13.09이후)으로 구분

** 주거 유형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의 단열기준 A그룹과 E그룹간 비교 :
단독(8.6→4.9 10^{-3} TOE/m²), 다중(7.8→5.7 10^{-3} TOE/m²), 다가구(7.9→4.4 10^{-3} TOE/m²),
아파트(5.2→3.0 10^{-3} TOE/m²), 연립(7.7→3.5 10^{-3} TOE/m²), 다세대(8.2→5.0 10^{-3} TOE/m²)

②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도입('01년)* 이후 인증받은 아파트는 미인증 아파트에 비해 난방사용량이 22%(3.83→2.97 10^{-3} TOE/m²) 낮고, 인증제 도입 이전 아파트 수준에 비해 26%(4.01→2.97 10^{-3} TOE/m²) 낮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건축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적용 요소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1년 공동주택부터 시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아파트와 미인증아파트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

□ 건축물 용도와 지역별 세분화 통계 분석이 불가능했던 종전의 에너지통계와 차별화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통계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 중인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http://www.greentogether.go.kr>)의 건물에너지 통계서비스를 통하여 누구나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공표에 이어
「비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단계적 마련함으로써 모든 건
물부문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에너지사용량 추이 및 에너지사용량 효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등을 지속적 개발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없는 바다 만든다

-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 2030년까지 50% 저감 목표 -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우려가 큰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1 μ m~5mm 미만)된 합성 고분자화합물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全) 주기 관리방안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 ◆ **해양발생**: 폐어구·폐부표 회수·관리 강화,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 **육상유입**: 하천 유입 차단 및 생산·유통·소비단계 플라스틱 저감
- ◆ **해외유입**: 주변국과 공동 조사·연구 및 합동 대응팀 구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주요 항·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

** (2019) 타당성 용역 → (2020)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 (2021) 시행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 친환경 부표 보급률: (2018) 23.6% → (2022) 50%

한편,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 해역관리청: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오염방지 활동 등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해양수산부, 지자체)

** 하천관리청: 하천의 사용 및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국회 계류 중)]

또한, 외국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수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구성(2019 상반기)할 계획이다.

[2]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 ◆ 사각지대 해소: 도서·해저 등 수거곤란 지역 수거 강화
- ◆ 수거 스마트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고효율 장비 도입
- ◆ 지역참여 활성화: 어업인 참여 유도 및 수거·관리를 위한 지역인력 배치

우선,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잘 되지 않던 도서 등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도서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 등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주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하여 수거하고 2022년에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항만, 어항 등의 해저쓰레기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22년까지 집중 수거한다.

수거체계 효율화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한다.

수거실적이 우수한 어촌계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어한기 등 일정 기간에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수거 환경을 조성한다.

* 자율관리공동체, 어촌체험마을 선정 시 수거 실적이 높은 어촌계에 가점을 부여

** 어업인·지자체 협조를 통해 일정기간(1개월↓) 동안 시·군 단위 해역별로 적용

[3]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

- ◆ **처리:**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구축 및 위탁 처리업체 관리 강화
- ◆ **재활용:** 해양쓰레기 관련 제품 재활용 의무율 상향 및 수요 확대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보급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양식용 부표 등 기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적용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또한, 공공부문의 재활용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제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환경부)

[4]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 ◆ 관리기반 강화: 해양폐기물법 제정 및 미세플라스틱 분포·위해성 조사
- ◆ 국민인식 제고: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및 맞춤형 교육 시행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실시한 슬로건* 공모전을 시작으로, 5월 31일 바다의 날에는 2019년을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 캠페인 공식 슬로건 : 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

또한,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며,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